

러시아-우크라이나 전쟁이 EU의 '개방형 전략적 자율성' 확대에 미친 영향

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1센터
북미유럽팀 부연구위원
yojang@kiep.go.kr

김윤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1센터
북미유럽팀 부연구위원
yoonjkim@kiep.go.kr

이철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1센터
북미유럽팀 선임연구원
cwlee@kiep.go.kr

오태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1센터
북미유럽팀 선임연구원
asroc101@kiep.go.kr

이현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1센터
북미유럽팀 선임연구원
hjeanlee@kiep.go.kr

임유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1센터
북미유럽팀 전문연구원
yjlim@kiep.go.kr

김초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1센터
북미유럽팀 전문연구원
crkim@kiep.go.kr

전혜원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부교수
hwjun10@mofa.go.kr



차 례

1. 연구의 배경 및 목적
2. 조사 및 분석 결과
3. 정책 제언

주요 내용

- ▶ 본 연구는 EU가 내세운 '개방형 전략적 자율성' 기조가 최근 공급망, 에너지 전환, 인적 교류, 안보 통합 등의 영역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고찰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함.
 - EU는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역내 첨단 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역외 의존도 축소를 도모하는 한편(전략적 자율성), 글로벌 차원의 협력이 필수적인 도전과제를 해소하기 위해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유사입장국과의 협력은 지속하고자 함(개방형).
- ▶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 기조는 에너지 전환, 우크라이나 난민 수용, 안보 통합 분야에서 일관적으로 관찰됨.
 - EU 및 개별 회원국은 전쟁발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여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의 단계적 축소 또는 중단, 에너지 수입국 다변화, 재생에너지 확대, 에너지 효율화 등을 도모함.
 - 유럽은 시리아 난민 위기 때와 달리 우크라이나 난민을 전 사회적으로 수용하여 전쟁으로 인한 안보 위협을 유사입장국에 속하는 우크라이나와의 연대를 통해 극복하고자 함.
 - 전쟁이라는 당면한 안보 위협에 대응하여 EU의 방위력 강화 필요성이 커졌지만,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도가 급증하면서 도리어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 확보는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로 남아있음.
- ▶ EU의 대외경제정책 중 우리 기업에 유리한 부분을 선별하여 기회요인으로 활용하면 국제공조가 필요한 글로벌 도전과제 해소에 공동으로 기여할 수 있음.
 - 「반도체법」, 「기후중립산업법」, 「핵심원자재법」 등에는 양자·다자 간 협력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며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도 EU 기업들과 유사한 수준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.

1. 연구의 배경 및 목적¹⁾

● 본 연구는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EU의 대응 정책에 주목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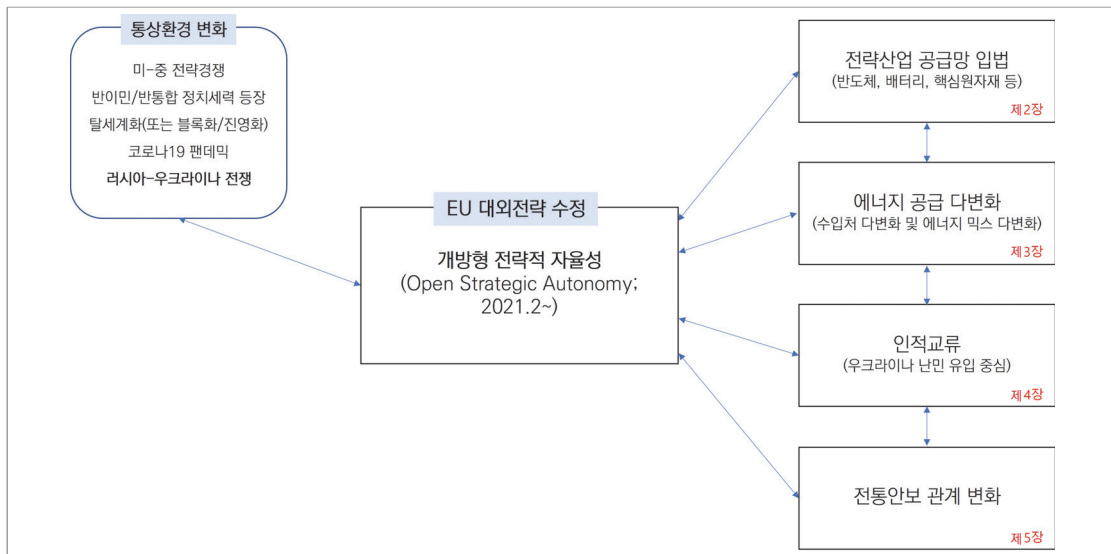
- 세계화와 다자주의 약화는 미국·유럽연합(이하 EU) 간 통상 및 안보 분야 갈등, 미국·중국 간 무역분쟁 등으로 가시화됨.
 - 미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북대서양조약기구(NATO) 방위비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폭 낮아졌고, 철강, 알루미늄 등 미국의 대EU 수입품 관세가 인상
 - 트럼프 집권하 관세 및 비관세 장벽 강화와 제조업 본국귀환 등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한 미·중 간 무역갈등이 진행되어 왔으며, 이는 현 바이든 정부에서 첨단산업 분야의 전략경쟁으로 심화·지속되는 중
-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기존의 흐름을 더 가속화하였으며, '보호주의의 진영화' 또는 '지경학적 파편화'가 진행되고 있음.
 - GDP에서 상품 및 서비스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대 중반부터 꾸준히 증가해오다 최근 10년간 정체기를 맞았으며, 해외직접투자는 금융위기 이후 감소세임.
 - 중국 등 인건비가 저렴한 국가에 집중되었던 투자의 방향이 미중 갈등, 팬데믹, 전쟁 등을 거치며 리쇼어링(니어쇼어링) 또는 프렌드쇼어링²⁾의 추세로 돌아섬.
- EU도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편승하여 자국 우선주의를 강화하는 한편,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 입장국과의 교류를 확대하는 '개방형 전략적 자율성(Open Strategic Autonomy)' 기조를 채택하고 있음.
 - 유럽은 팬데믹 중 보건의료 산업에서 공급망 병목현상을 경험하고, 전쟁 중 에너지 위기를 겪으면서 전략산업에서 대외의존도 축소의 필요성을 절감함.
 - 자국 디지털, 친환경 분야에서 역내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을 위해 다양한 산업 및 통상정책을 제안함.
 - 한편 EU는 자유, 민주, 평화, 법치, 규범에 입각하여 무역 등 '가치'를 중심으로 한 세계화의 재편을 주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.

1) 본 정책연구브리핑은 2023년 KIEP 기본연구 『러시아-우크라이나 전쟁이 EU의 '개방형 전략적 자율성' 확대에 미친 영향: 에너지 전환, 인적 교류, 안보 통합을 중심으로』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음. 특별한 인용이 없으면 상기 보고서를 참고한 내용임.

2) '리쇼어링(니어쇼어링)'은 한 국가가 글로벌 공급망을 본국(또는 지리적으로 본국과 가까운 지역)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, '프렌드쇼어링'은 공급망을 본국과 동맹을 맺은 국가 또는 본국과 유사한 가치를 공유하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.

- 본 보고서에서는 러시아-우크라이나 전쟁(이하 러-우 전쟁) 전후 EU의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이 에너지 전환, 인적 교류, 안보통합 분야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고찰하고 이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.
 - 전쟁의 영향으로 가장 큰 변화를 경험한 세 가지 분야를 고찰함으로써, EU가 추구하는 '개방형 전략적 자율성' 개념이 실제 정책에 어떻게 활용되고 실현되는지 분석함(그림 1 참고).
 - 대러시아 에너지 의존도가 높았던 EU 경제는 전쟁으로 인해 에너지 수급 불균형과 전력 가격 급등이라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으며, 이에 지정학적 불안에 대비한 에너지 공급선 다변화 문제가 당면한 과제로 떠오름.
 -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수백만 명의 전쟁난민이 발생하여 EU 회원국으로 유입되면서 임금, 고용, 국가재정, 부동산, 사회통합 등에 영향을 미침.
 - 마지막으로 전쟁을 거치며 전통적인 중립국이었던 스웨덴, 핀란드 등이 NATO 가입을 추진하며 역내 안보 통합 심화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, 대미 안보 의존도 증가와 EU의 전략적 자율성 증대 사이의 조화가 중요해짐.
 - 본 보고서에서는 상기한 3개 분야의 최근 변화를 조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대응 방향과 한-EU 협력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.
 - EU의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 기초 확대가 한국의 대외 관계 및 국내 기업의 경제 활동에 미칠 영향을 가늠해 봄.
 - 상기 정책의 기회요인과 도전요인에 대한 각각의 대응 방향을 제시함.
 - 아울러 급변하는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EU의 대외경제정책 수립 양상을 참고 삼아 한국정부가 시도할 수 있는 정책 대안에 대해서 논의함.

그림 1. 보고서의 구성



자료: 장영욱 외(2023).

2. 조사 및 분석 결과

1) '개방형 전략적 자율성'의 정의

- '전략적 자율성'이라는 개념은 2010년대 중반까지 주로 안보 및 국방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으로 활용되다가 2017년 이후 정치, 외교, 경제 분야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장됨.
 - 전략적 자율성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정책 분야에서 다른 국가에 의존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함.
 - 이 개념은 1994년 프랑스 국방백서에 처음 등장하여 주로 안보 및 국방 분야에서 활용됨.
 - 2010년대 중반 관찰된 다자주의 약화, 브렉시트,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국 우선주의적 정책, 중국의 공세 강화 등 유럽에 적대적으로 작용하는 통상환경 변화 속에서 유럽의 이익을 방어할 필요성이 커짐.
 - 특히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은 전략적 자율성 개념이 확대된 계기로, 팬데믹으로 인해 필수 의료장비 및 백신 공급부족이 심각해지면서 해외 공급망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전략적으로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공고해짐.
 - 2021년부터 전략적 자율성의 개념이 EU의 기본 철학이 되며 사실상 EU 정책 모든 영역으로 확대됨.
- 경제통합의 외연을 넓히기 원하는 EU는 내부의 역량 강화에 집중하는 전략적 자율성의 개념을 그대로 도입하는 데 부담을 느꼈으며, 이에 따라 국제협력 요소가 가미된 '개방형 전략적 자율성'을 제시함.
 - EU는 독일, 프랑스, 이탈리아와 베네룩스 3국이 1952년 유럽석탄철강공동체를 결성한 이래 경제통합의 범위를 확대해옴.
 - EU는 2023년 기준 총 27개 회원국을 가진 거대한 지역경제블록으로 발전하였으며, 현재 8개 국가가 EU의 공식 가입 후보국으로 올라와 있음.
 - EU의 주요 문건은 전략적 자율성의 개념에 국제협력을 포함하여 제시하였으며, 2021년 이후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이라는 단어가 공식 문건에 등장하기 시작함.
 - 2016년 'EU 외교·안보 분야 글로벌 전략(EU Global Strategy for Foreign and Security Policy)'의 시행계획에서는 외교안보 분야의 전략적 자율성을 "필요할 때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동시에 가능한 한 국제 및 지역 파트너와 행동하고 협력할 수 있는 능력"으로 정의함.
 - 2021년 2월 발표된 신통상전략은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을 핵심 개념으로 제시하였으며, 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'개방'을 강조하되, 규범에 입각한 공정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같이 제시하였음.

●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은 외부의 도전에 맞서 EU 및 EU 회원국의 이익을 수호하되,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와는 적극 협력을 도모한다는 기조를 반영한 개념임.

-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주요 분야의 역내 경쟁력을 증대시키는 한편 외부에 대한 의존성을 낮추어야 함.
 - 특히 신뢰할 수 없는 무역상대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것은 전략적 자율성 달성의 주요 목표로 자리매김함.
- ‘개방형’ 기조 아래 국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추구한다는 점에는 변화가 없지만, 이 기조는 가격결정 기제의 효율성보다 규범, 가치, 지정학적 관계 등에 더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EU의 예전 대외정책과 차이를 보임.

2) ‘개방형 전략적 자율성’의 구현

① 에너지 전환

● [EU] EU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 완화, 수입원 다양화, 에너지 가격 안정, 글로벌 에너지 수요 파악, 생산 및 운송 관리, 탈탄소 등 다방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인 통합 대응 방안을 내세우고 있음.

- 현재 EU의 에너지 전환 정책은 2015년 2월에 공표된 ‘EU 에너지 전략’에 근거함.
 -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후 발생한 에너지 불안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‘EU 에너지 전략’을 통해 △ 에너지 공급원 다변화, △ 단일 내수시장 활성화, △ 에너지 수입 의존도 축소, △ 탄소감축 경제 지향, △ 친환경·저탄소 연구 지원 등 다섯 가지 목표를 제시함.
 - 이후 「거버넌스 및 전력 상호 연결 규정(Regulation(EU) 2018/1999)」, 「전략 시장 설계 지침(Directive(EU) 2019/943, 2019/944)」, 「에너지 효율 지침(Directive(EU) 2018/2002)」, 「건물 에너지 효율성 지침(Directive(EU) 2018/844)」, 「재생 에너지 지침(Directive(EU) 2018/2001)」, 「가스 시장 설계 지침(Directive 2019/73/EC, Regulation(EC) No 715/2009)」, 「범 EU 에너지 인프라 규정(Regulation(EU) 2022/869)」 등 분야별 세부 규제 법률이 마련됨.
- 2021년 7월 EU는 ‘Fit for 55’를 발표하며 유럽 그린딜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에너지 분야 전략을 제시함.
 - 에너지 소비 부문에서 재생에너지 비중 32%까지 확대(이후 42.5%로 목표 상향), 에너지 효율 32.5% 수준 개선, EU 역내 에너지 체계 통합률 최소 15%까지 달성 등 세 가지 목표를 제안하였고, 2023년 3월 공식 채택됨.
 - 상기한 「에너지 효율 지침」, 「건물 에너지 효율성 지침」 등이 개정되고, 「대체 연료 인프라 배치에 관한 규정(COM/2021/559)」, 「ReFuelEU 항공 이니셔티브(COM/2021/561)」와 「FuelEU 해양 이니셔티브(COM/2021/562)」 등과 같은 운송 분야의 새로운 규정 제안이 포함됨.

- [개별 국가 전략] EU의 전략과 별개로 독일, 프랑스, 핀란드, 폴란드 등 EU 회원국은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 기조 아래 각 국가의 사정에 맞는 에너지 정책을 펼치고 있음.
 - 최근 독일 에너지 정책은 재생에너지원의 활용 확대, 모든 원자력 발전소 폐쇄, 그 반대급부로 화력발전 비중 확대가 특징적임.
 - 독일은 높은 재생에너지 비중(44%)을 바탕으로 탈원전을 추진하였지만, 화력발전 비중이 반등하는 부작용을 겪음.
 - 프랑스는 독일과 반대로 원전에 대한 의존도를 높게 유지하고 있으며, 재생에너지원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되고 있음.
 - 2050년 기후변화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, 과도기적으로 비교적 탄소배출량이 적은 원전에 의지하고 있음.
 - 프랑스는 이미 높은 원전 의존도(63%)를 단계적으로 50%까지 축소하려고 계획하였으나, 러-우 전쟁을 거치며 달성 목표 연도를 연기하는 움직임을 보임.
 - 핀란드는 재생에너지 활용 비중이 높은 저탄소 국가이지만 에너지 집약도와 인구당 에너지 소비량이 높고 화석연료의 경우 전량 해외 의존하는 특징이 있음.
 - 화석연료 비중이 빠르게 감소해왔던 핀란드는 지리적 근접성으로 인해 대러시아 에너지 의존도가 높다는 특징이 있으며, 러-우 전쟁 발발 이후 노르웨이, 에스토니아 등 주변국을 통한 에너지 수입 조치로 위기를 타개하고 있음.
 - 단, 에너지 수입처 다변화가 여의치 않아 일시적으로 원전 의존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.
 - 폴란드는 EU 회원국 가운데 화석연료 의존도가 가장 높은 국가(41%)이며, 이로 인해 EU 차원의 녹색전환 정책 추진에 있어 가장 많은 어려움이 예상됨.
 - 폴란드는 원전사업 개시를 통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며,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이 높은 국가로서 주목할 필요가 있음.
 - 재생에너지 확대를 시도하면서도 원전과 수소발전 등 대체에너지원 개발을 도모하고 있는 점이 4개국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며, 수입처 다변화, 대체에너지원 개발을 통한 에너지 자립도 향상은 에너지 분야에서 EU의 전략적 자율성을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됨.
 - 에너지 분야의 대외의존도 축소 노력과 국제협력을 통한 에너지 자립도 향상 의지는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 확대와 일치하는 정책 목표로 볼 수 있음.

② 인적 교류

- [우크라이나 난민 유입] 러-우 전쟁 발발 후 우크라이나 난민이 유럽으로 대거 유입되어 유럽의 노동인구를 증가시켰으나 내국인 및 기존 이민자의 임금, 실업률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됨.
 - 난민 중 여성, 아동 비율이 높고 고학력, 고숙련 노동자가 주로 유입되었으며, 전쟁 발발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난민의 노동 및 직업훈련 참여 비율이 점점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

- 우크라이나에서 전문직에 종사했던 난민이 유입국에서는 비숙련 직업에 종사하는 숙련도 불일치(skill mismatch) 현상이 두드러짐.
- 현재까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체코, 폴란드, 에스토니아 등에서 2% 내외의 노동인구 증가가 관찰되고 있으며, 내국인과 기존 이민자의 임금, 실업률 등 노동시장 조건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임.

● [난민의 노동시장 통합] 우크라이나 난민의 유입국 내 노동시장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, 지역 내 언어 교육 프로그램 제공이 난민의 고용확률을 6~7%p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남.

- 언어 교육 프로그램이 고용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UNHCR이 제공하는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해 이항반응모형 회귀분석(probit regression)을 수행함(아래 식 참고).

$$Work_i = \beta_0 + \beta_1 Language_i + \Theta X_i + \epsilon_i$$

- $Work_i$ 는 난민 i 의 고용 여부, $Language_i$ 는 난민 i 거주지역에 언어 프로그램 제공 여부, X_i 는 교육수준, 모국어, 혼인 여부, 기존 직업, 유입국 거주기간 등의 통제변수를 의미함.
- 2022년 6~8월 사이 폴란드 바르샤바, 크라쿠프, 브로츠와프 세 도시에 거주한 우크라이나 난민 가구 992개 대표를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함.
- [표 1]의 결과를 보면, 언어 프로그램 제공 시 종속변수가 0.23~0.25 증가하여, 고용확률이 약

표 1. 이항반응모형 회귀분석 결과 요약: 평균한계효과

구분	모형1	모형2	모형3	모형4
$language_i$	0.250*** (0.090)	0.230** (0.091)	0.232** (0.094)	0.262*** (0.096)
혼인 상태 관련 변수	포함	포함	포함	포함
출발 지역 변수	포함	포함	포함	포함
폴란드 도착 월	포함	포함	포함	포함
아이 돌봄의 책임으로 인해 노동공급을 하지 못하는 경우 유무	미포함	포함	포함	포함
경력 관련 변수	미포함	미포함	포함	포함
가구 크기	미포함	미포함	미포함	포함
표본 수	992	992	992	992

주: 이항반응모형 중 프로빗(probit) 모형을 이용함. 괄호 안은 강건한 표준오차임. 통제변수의 경우 본문 참고. **, ***: 각각 유의수준 5%, 1%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.

자료: 장영욱 외(2023).

6~7%p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.

○ 전반적으로 유의수준 5% 혹은 1%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남.

● [인적 교류의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] 우크라이나 난민에 대한 유럽의 전 사회적 수용은 시리아를 비롯한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이민자·난민 수용 양상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며, 이러한 차이는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 개념으로 설명 가능함.

-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러-우 전쟁 발발은 EU의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이 맞닥뜨린 안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고, 안보에 대한 위기의식이 유럽의 우크라이나 난민 수용을 촉진 하였음.

○ 난민 수용을 통해 인권 신장이라는 가치 추구를 하려는 것이 EU의 목표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지만, 시리아 난민과 우크라이나 난민 수용에 대한 태도 차이는 가치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음.

○ 우크라이나 난민 수용은 EU가 자국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선별적으로 이민자·난민을 받아들인다는 경향의 한 단면을 보여주며, 이는 EU의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 확보 노력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음.

③ 안보 통합

● [안보 분야 전략적 자율성 개념 변화] 전쟁이라는 당면한 안보위협에 대응하여 EU의 방위력 강화 필요성이 강해졌지만,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도가 급증하면서 도리어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 확보는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로 남아 있음.

- 전통적인 중립국이었던 스웨덴, 핀란드가 미국 주도 NATO에 가입한 것은 미국에 의존하는 방위력 확대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했음을 의미함.

- 이와 동시에 EU는 NATO와 별개로 자체적인 안보 및 방위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을 취함.

○ 대우크라이나 무기, 군수품 지원과 우크라이나군 훈련 임무 시행 등이 단적인 예임.

○ EU 차원의 군수품 조달 시장 구축 노력 역시 「유럽방위산업 강화 공동조달법」 통과로 일정 정도 실현된 것으로 평가됨.

- EU의 안보 분야 전략적 자율성 확보는 미국 및 NATO와의 관계 설정, 역내 방위산업 생태계 구축, 전후 우크라이나 방위력 구축 지원, 인도태평양 국가와의 안보 협력 등의 진척도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.

3. 정책 제언

● [종합] EU 정책에서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이 확대됨에 따라 나타나는 도전요인 및 기회요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및 활용책을 마련해야 함.

- EU가 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목표치를 설정하고 각종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은 우리나라 수출기업 또는 현지 진출 기업에 도전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음.
 - 예컨대 반도체 제조의 경우, 우리나라가 현재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지만 앞으로는 EU의 도전에 맞서야 할 처지에 놓임.
 - 2차 전지 역시 현재는 우리나라 기업이 폴란드, 헝가리 등에서 주요 생산자이지만 향후 EU의 지원을 받아 역내 기업의 점유율이 커지면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큼.
- EU가 다른 한편으로 '개방'을 내세운다는 점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모색해 볼 수 있는 부분임.
 - 「반도체법」, 「기후중립산업법」, 「핵심원자재법」 등에는 EU 입장에서 신뢰할 만한 파트너와의 양자·다자 간 협력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빠짐없이 포함되어 있음.
 - 특히 EU의 최근 공급망 입법안은 지리적 차별 요소가 약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,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도 EU 기업들과 유사한 수준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.
- 따라서 EU가 제시한 대외경제정책 중 우리나라에 유리한 부분을 일별하여 기회요인으로 활용하면 우리 기업에 이익이 될 뿐 아니라 국제질서 재편, 공급망 압력, 기후변화 대응, 노동공급 부족 등 국제공조가 필요한 글로벌 도전과제 해소에 EU와 우리가 공동으로 기여할 수 있음.

● [개별 분야 협력] 본고에서는 구체적으로 에너지 분야, 인적 교류 분야, 안보 분야에서 EU와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영역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시함.

- 에너지 전환 분야에서는 EU와 재생에너지 확대 협력, 수소 및 원자력 발전 협력 등을 고려할 수 있음.
 - 그린딜 산업계획에서 제시한 대로 재생에너지 생산 및 인프라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, 인력 양성 지원, 연구개발 투자 유인 제공 등을 활용하여 우리 기업이 EU 기업과 함께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음.
 - 수소 관련 기술개발에 적극적인 스타트업을 지원하고, 한국과 유럽의 유망 스타트업이 상호 협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함.
 - 또한 프랑스, 폴란드 등 원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국가들과 폐기물 및 SMR 기술 혁신, 인프라 구축 등에서 협력을 확대할 수 있음.

- 인적 교류 분야에서는 EU의 난민 수용 정책을 참고하여 한국이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영역을 모색함과 동시에 향후 난민 유입을 통해 한국에 발생 가능한 문제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.
 -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난민인정률이 가장 낮은 국가로, 행정절차 정비 및 난민인정 기준 수정을 통해 국제사회의 난민 분담 노력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.
 - 난민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맞춘 세분화된 취업 지원정책 개발, 구직활동에 대한 유인체계 설계, 취업 후 사후 관리 제공 등이 난민 정착 프로그램의 성공을 결정 짓는 주요 고려사항이 됨.
- 안보 분야에서는 유럽의 국방력 강화 및 국방비 증액이 한국 국방 및 방위 산업에 주는 함의를 파악하여 협력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.
 - 특히 한국산 무기 구입 및 투자 유치에 적극적인 폴란드와 같은 EU 회원국과의 정책적 협력을 EU 차원에서의 정책적 변화 대응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음. **KIEP**



참고문헌

장영욱, 김윤정, 이철원, 오태현, 이현진, 임유진, 김초롱, 전해원. 2023. 『러시아-우크라이나 전쟁이 EU의 ‘개방형 전략적 자율성’ 확대에 미친 영향: 에너지 전환, 인적 교류, 안보 통합을 중심으로』. 기본연구. 대외경제정책연구원.